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정부

2025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장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1. 임무와 비전	1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2
3. 목표 및 과제현황	4
4. 조직현황	5
5. 2025년도 성과관리 추진체계	6

제2장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

1. 재정사업 성과	7
2.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현황	10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1. 전략목표 I	11
-----------------	----

【별첨】

1. 회계·기금별 예·결산 현황	39
2. 사업유형별 재정운용 현황	40
3. 성과 달성도 현황	41
4.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결산 현황	42
5. 프로그램별 사업 설정현황	43
6. 2025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45
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47

1. 임무와 비전

임무와 비전

☐ 임무(Mission)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비전(Vision)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청 렬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
- 국민행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
- 현장중심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 처리방식
- 창 의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고방식
- 소 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임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전략목표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
목 표**



I-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 참고 : 대표 성과지표 〉

1 국가청렴도(CPI)

○ 개념 및 의미

- (개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수준
- (의미) 국가청렴도는 각국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국제평가지수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95년부터 매년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결과 발표('26.2. 기준)

○ 선정사유

- 국가청렴도는 국가별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이며,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임

○ 지표의 추이(최근 5년)

연 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점)	62	64	64	64	65	65
실적(점)	62	63	63	64	63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 근거

■ 측정방법(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수행기관 : 국제투명성기구(독일 소재)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PERC, IMD 등 개별 국제평가기관이 매년 수행하는 기업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들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국가별로 종합하여 산출

■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26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간('23~'25년)의 평균 실적 63.3점에서 약 2.6% 상향한 65점으로 설정*하였으며, '24년 달성한 64점이 역대 최고 점수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65점은 2025년 국가청렴도 기준 세계 28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미국(64점, 29위)보다 순위와 점수가 높은 수준

** '25년 국가청렴도가 전년보다 1점 하락한 63점이나, 역대 최고 점수가 64점인 점을 감안하여 2점 상승을 목표로 도전적으로 설정

- (외부환경 대비)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관련한 국제사회 등의 대외적 인식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관리방안

-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여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동력을 확보

3. 목표 및 과제현황

(단위 :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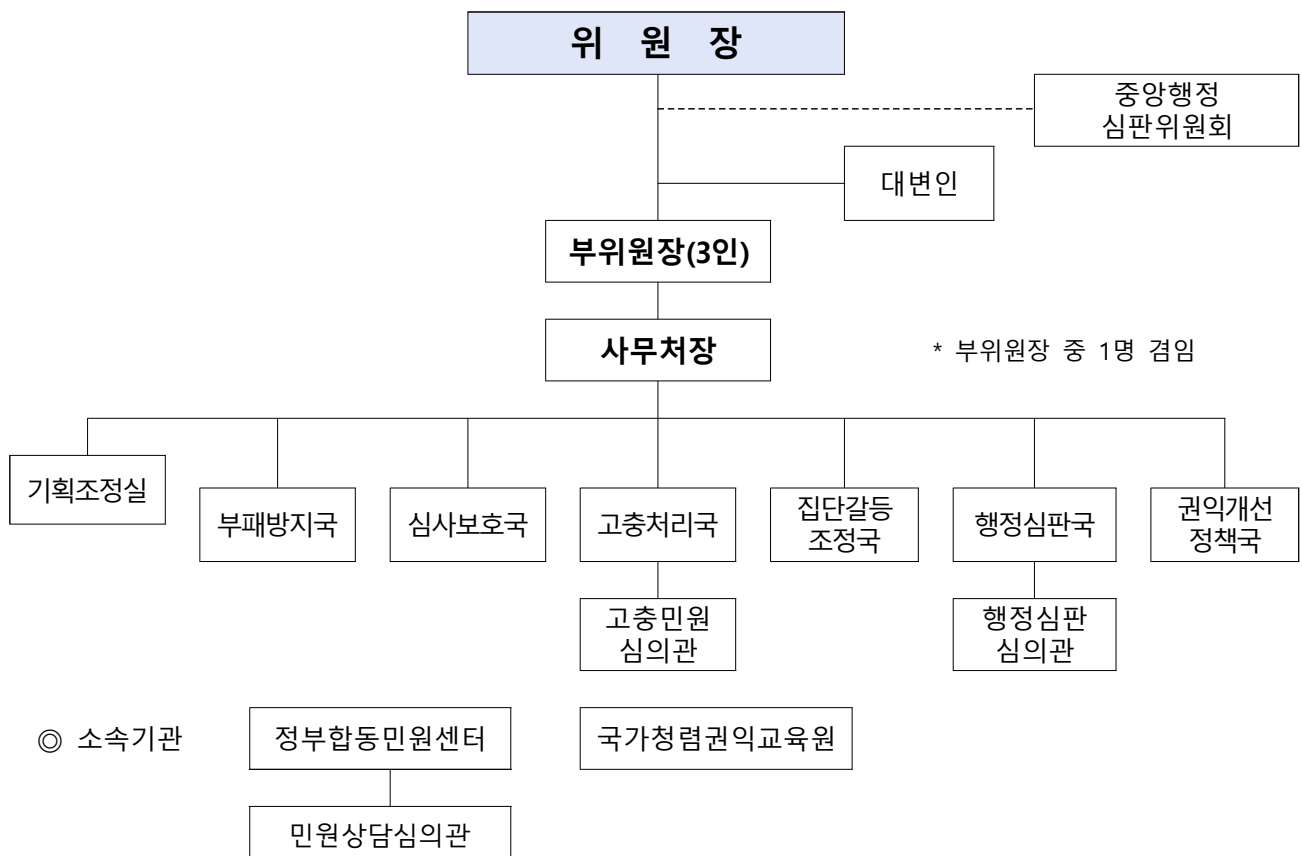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1	7	19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I -1 국민권익증진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4. 조직현황

□ 조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 중앙행정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6국 2관 1대변인 46과 5팀 2소속기관
 - ※ 직제 외 기구인 고충처리국 서민경제고충조사과(자율기구), 110통합체계운영추진단(임시조직)은 미포함



□ 인원

(’26.1.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일 반 직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	587	4	18	15	40	41	209	244	1	12	3
현원	552	3	15	12	38	35	202	232	1	11	3

5. 2025년도 성과관리 추진체계

□ 성과목표관리 추진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요경력	비고
○○○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現)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평가단 ■(前)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 ■(前)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위원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부연구위원	■(現)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위원회 연구위원 ■(前) 경기 민관합동 소방조직진단반 민간위원 ■(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現)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現) 행안부 책임운영기관평가단 평가위원 ■(前)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위원
○○○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現)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 ■(現)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위원 ■(前)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위원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現)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 ■(現)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위원 ■(現) 한국행정연구 편집위원	위원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 (개최) '25년도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는 총 4회(2, 3, 5, 8월) 개최
- (심의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 수행 및 자율평가 결과 심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심의 등

○ 자체평가위 선정 우수 프로그램

- 해당사항 없음(단일 프로그램)

○ 자체평가위 선정 미흡 프로그램

- 해당사항 없음(단일 프로그램)

1. 재정사업 성과

(1) 2025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총괄표>						
(단위 :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¹⁾	달성 ²⁾	미달성 ³⁾	달성도 평균 ⁴⁾
1	1	1	-	-	1	96.9%
		100.0%	-	-	100.0%	

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 수
 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 수
 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 수
 4) 성과지표별 달성도(100% 이상인 경우 100%로 계산) 합계 / 전체 성과지표 수

□ 재정운용 주요성과

- 기관의 재정사업이 단일 전략목표로 구성됨에 따라, 아래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에 관련 내용을 기술함

(2)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 전략목표 1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전략목표 주요성과

【 고충민원 및 집단민원 해결로 주민숙원과 사회갈등 해소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 >

- (민원해결)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사실행위,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경청·소통하여 총 14,726건 처리('25년)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등 인용률 25.5%
- (집단민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집단민원 239건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 약 6만6천명의 주민 숙원 해소('25년)

※ (해결사례) ▲철도건설 고성토 구간을 교량화하여 마을 단절과 통행 불편 등 주민피해 해결 ('25.8월), ▲기피시설로 인식되던 저류시설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변공원으로 조성('25.6월)

【 국민 소통을 통한 국정 운영 지원 】

< 국민신문고 플랫폼 이용기관 확대 및 선제적 AI 도입 >

- (이용현황)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1,312개('24년 1,212개)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95.5%(서울 11개 지역 외 232개 전체 통합)의 민원시스템을 통합
※ 국민신문고 회원수 370만명, 방문수 6,668만명('25.12월 기준)
- (AI 서비스 도입) 빈발민원 자동 병합, 외국어 민원 자동 번역 등 신규서비스 도입으로 국민 편의·업무 효율 제고('25.6월)
- (국정운영 지원)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제안창구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제안을 검토, 우수제안을 발굴하여 국정과제에 반영('25.6~8월)
※ 정책제안 13,588건 전수 검토 → 우수제안 420건 발굴 → 237건 반영(국정기획위 백서)

【 행정심판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 】

- (행정심판) '25년 인용률*(일반사건 기준)은 28.3%, 평균재결기간 54.8일 (법정60일, 추가30일 가능)로 '24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속히 국민권익을 구제
* 인용률(%) : [전체사건] ('24년) 6 → ('25년) 9 / [일반사건] ('24년) 17.5 → ('25년) 28.3
※ 평균재결기간 : ('24년) 55.6일 → ('25년) 54.4일
- (제도개선) 국민안전 강화, 일상 속 불편 해소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해 권익 침해의 구조적 요인 해소('25년 총 36건)
※ (개선사례) ▲고위험운전자 면허 관리 개선('25.3), ▲긴급자동차 출동 장애 개선 등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25.9),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적 개선('25.9)

【 부패·공익침해행위 엄정 대응 및 청렴문화 확산 노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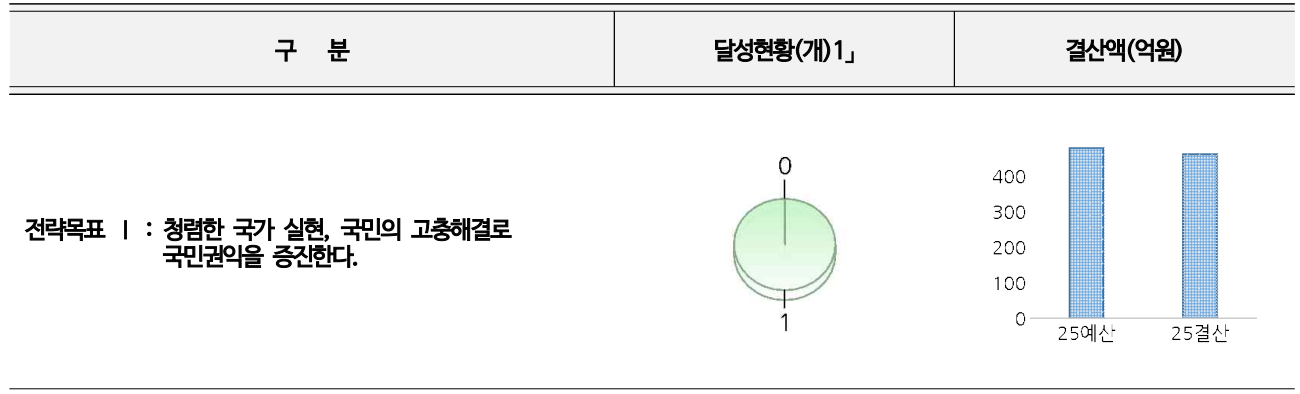
< 적극적 신고사건 처리 및 고강도 실태조사로 부패 억제기능 강화 >

- (사건처리) '25년 부패·청탁·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14,281건을 접수하여, 13,513건 처리 완료('24년 대비 약 22.8% 증가)
- (실태조사) 재정 누수 유발 요인 기획조사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적발사례) ▲(수산종자 방류사업) 서남해 일대 조개종자 방류사업 조사 결과, 특수관계업체에 의한 입찰비리(103억)와 납품비리(68억) 적발('25.7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개 지자체 조사 결과, 업체 선정 특혜와 보조사업비 횡령 의혹 등 약 218억원 집행 부적정 등 확인('25.12월)

< 시·도 교육청 업무협약 등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

- (업무협약) 17개 시·도교육청 및 24개 대학과 협약을 통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청렴교육 확대(청렴과목 개설, 청렴특강 지원 등)

＜ 전략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그래프 ＞



1」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에 해당하는 성과지표 수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 미만), : 미달성(100% 미만)

(3)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구 분	'24년 달성	'25년 달성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I-1)		
▪ 국가청렴도(CPI) (단위:점)	○	X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미달성(100% 미만)

2.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현황

(1) 자원배분 현황

□ 자원현황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비중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 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380	343	481	460	100.0

□ 자원배분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 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를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
 -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목표 관리체계 일치화에 따라 재원도 이에 맞추어 통합 배분

□ 특이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의 복합적인 조직과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의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예산 체계도 1개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 성과목표도 예산체계에 맞추어 ‘국민권익증진’이라는 단일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주요 조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아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체계 및 예산 성과의 책임성을 확보

(2) 자원배분 추이

- 전년도와 동일하게 1개의 단일 전략목표에 1개의 단일 프로그램(국민권익증진)을 설정하여 자원배분

전략목표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반부패정책 강화를 통한 청렴·공정 문화 확산
- 갈등·고충의 적극적 대응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강화
- 국민소통 일상화를 통한 국민체감형 정책·제도 개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기능별로 분산된 국민권익보호 창구의 통합·일원화로 국민소통 기능 강화 및 국민권익 증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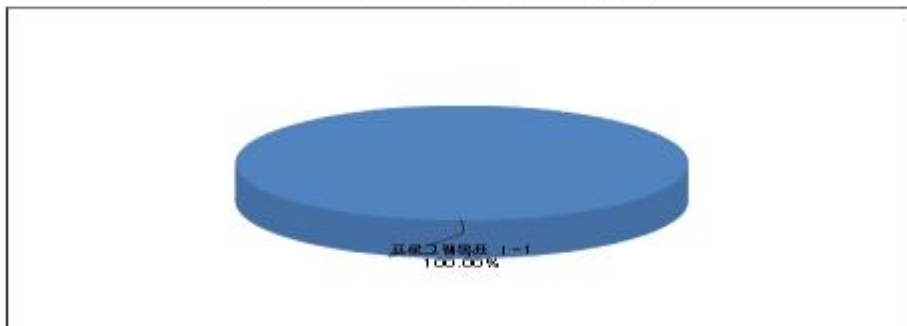
◇ 주요성과

- (청렴확산) 적극적인 신고사건 처리 및 고강도 실태조사로 부패 억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대학교 협약을 통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 (고충처리) 국민의 고충민원을 경청·소통하여 처리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집단민원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하여 주민숙원과 사회갈등 해소
- (국민소통)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지속 확대, AI 서비스 도입, 국정기획위 ‘모두의 광장’ 우수제안 발굴 등 국민 소통을 통한 국정 운영 지원
- (행정심판) 행정심판 인용률을 향상시키고 평균 재결기간을 단축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국민권익 구제 추진
- (제도개선) 국민안전 강화, 일상 속 불편 해소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해 권익 침해의 구조적 요인 해소

◇ 전략목표와 임무의 논리적 관계

-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정부·국민이 행복한 나라 실현

<프로그램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 전략 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단위 : 개)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I-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1	0 (0)

* 달성지표 수는 초과달성 지표 수와 달성 지표 수의 합, 괄호 안은 초과달성된 지표의 개수에 해당

프로그램 목표 I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 프로그램 성과 담당자 : 민성심 부패방지국장

(실무자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선, 044-200-7118,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문소희, 044-200-7612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 목표 주요내용

- 반부패정책 강화를 통한 청렴·공정 문화 확산
- 갈등·고충의 적극적 대응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강화
- 국민소통 일상화를 통한 국민체감형 정책·제도 개선

□ 주요 사업 및 집행현황

<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023	청렴권익문화확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2,025	0	0	2,025	1,991	98.3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331	0	0	1,331	1,315	98.8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644	0	-2	2,643	2,543	96.2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152	0	-10	2,142	2,063	96.3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4	0	6	100	96	96.1
		채용비리통합신고 센터운영	114	0	7	121	105	87.4
		신고자보호보상및 공익신고제도운영	0	0	0	0	0	0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0	0	0	0	0	0
		청탁금지제도운영	0	0	0	0	0	0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0	0	0	0	0	0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1,069	0	32	1,101	1,094	99.4
	부패·고충제도개선 및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97	0	7	104	93	89.1
		종합상담창구운영	0	0	0	0	0	0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운 영(정보화)	5,433	0	0	5,433	5,376	99.0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5,780	0	-3	5,777	4,429	76.7
		통합콜센터시스템 운영(정보화)	0	0	0	0	0	0
	청렴권익대내외 협력강화	반부패기술지원 (ODA)	160	0	0	160	151	94.4
		청렴권익국제 교류	382	0	0	382	372	97.5
		청렴권익민간협력	672	0	-9	663	459	69.3
	소계		21,953	0	28	21,981	20,088	91.4
2024	청렴권익문화 확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796	0	0	1,796	1,754	97.6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324	0	50	1,374	1,361	99.1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3,066	0	3	3,069	3,001	97.8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239	0	-43	2,196	2,111	96.1
		공직자행동강령운영	89	0	14	103	101	98.5
		채용비리통합신고 센터운영	109	0	-17	92	77	83.3
		신고자보호보상및 공익신고제도운영	0	0	0	0	0	0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0	0	0	0	0	0
		청탁금지제도운영	0	0	0	0	0	0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0	0	0	0	0	0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1,177	0	-76	1,101	999	90.8
	부패·고충제도개선 및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92	0	7	99	99	99.9
		종합상담창구운영	0	0	0	0	0	0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22,372	0	0	22,372	19,057	85.2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3,419	1,196	41	4,656	4,653	99.9
		통합콜센터시스템 운영(정보화)	0	0	0	0	0	0
	청렴권익대내외 협력강화	반부패기술지원 (ODA)	298	0	0	298	286	95.9
		청렴권익국제 교류	391	0	-22	369	357	96.6
		청렴권익민간협력	455	0	0	455	452	99.4
	소계		36,827	1,196	-43	37,980	34,307	90.3
2025	청렴권익문화 확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390	0	0	1,390	1,359	97.8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600	0	0	1,600	1,575	98.4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984	0	0	2,984	2,868	96.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411	0	4	2,415	2,237	92.6
		공직자행동강령운영	78	0	0	78	77	99.3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채용비리통합신고 센터운영	100	0	-20	81	62	77.0
		신고자보호보상및 공익신고제도운영	5,500	0	-74	5,426	5,066	93.4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206	0	15	221	212	95.9
		청탁금지제도운영	166	0	3	169	155	92.0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210	0	0	210	190	90.3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1,543	0	0	1,543	1,324	85.8
	부패·고충제도개선 및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83	0	0	83	80	96.8
		종합상담창구운영	9,526	0	0	9,526	9,199	96.6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7,665	3,236	0	10,901	10,620	97.4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3,346	0	121	3,467	3,466	100.0
		통합콜센터시스템 운영(정보화)	6,784	0	-47	6,737	6,331	94.0
	청렴권익대내외 협력강화	반부패기술지원 (ODA)	250	0	0	250	248	99.3
		청렴권익국제교류	670	0	0	670	644	96.2
		청렴권익민간협력	318	0	2	320	306	95.7
	소계		44,830	3,236	4	48,070	46,021	95.7

(2)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23년	'24년	'25년
국가청렴도(CPI) (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목표	64.0	64.0	64.0	65.0
		실적	63.0	63.0	64.0	63.0
		달성률(%)	98.4	98.4	100.0	96.9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자료수집방법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국제평가 기관의 평가 자료 중 공공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개별지수를 집계·산출
 - 측정대상기간 : '23년 ~ '25년(측정대상기간이 각기 다른 개별지수의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하므로 매년 측정대상 기간 변동)
 - 측정수행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국제 지표별로 기업경영인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정성평가를 통해 국가별 점수를 산출하고, 지표별 결과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종합·환산하여 국가청렴도 점수 산출

○ 품질확인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S&P 등 공신력 있는 총 9개 기관의 9개 지표 활용

○ 품질확인 상세

- (개괄) 우리나라 CPI 산정에 포함된 개별지수는 9개 기관의 9개 지수
 - ※ 국제투명성기구의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는 총 13개이며,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9개, 영국·독일은 8개, 브루나이, 세인트빈센트는 3개 지수 반영
- (상승지수) PERC(아시아부패지수), PRS(국제위험가이드), WJP(법치주의지수) 3개
- (유지지수) EIU(국가위험지수), WEF(국가경쟁력지수), V-DEM(정치부패지수) S&P(국제기업환경위험지수) 4개
- (하락지수) IMD(국가경쟁력지수), BF(변혁지수) 2개

< 2025년도 CPI 반영 개별지수 평가 결과 >

조사자	지수 구분	조사 항목	'24년 점수	'25년 점수	변동
기업인 설문조사	국제경영개발원 (IMD)	뇌물이나 부패 존재 여부	61	49	↓ 12
	세계경제포럼 (WEF)	뇌물 및 추가 비용 제공 정도 공적자금 유용정도 등	62	62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국가별 부패수준	55	57	↑ 2
전문가 평가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	공무원의 공적지위 악용 정도	70	71	↑ 1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 (V-Dem Institute)	행정·입법·사법 부패수준 공공부문 부패수준	64	64	-
	정치위기관리그룹 (PRS)	정치시스템 내부 부패수준	71	76	↑ 5
	이코노믹인텔리 전스유닛(EIU)	공적자금 유용정도 계약 등 뇌물관행	67	67	-
	베텔스만 재단(BF) 변혁지수(TI)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64	60	↓ 4
	S&P (IHS Markit)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수준	59	59	-

(3)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대응 추진

- (종합대책 수립) CPI에 반영되는 9개 개별지수의 시계열 흐름, 분야별 취약 분야 파악 및 평가기관 논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 CPI 반영 개별지수별 분석 및 청렴선진국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정책홍보·소통 강화) 한국의 반부패정책 사례 전수를 원하는 외국 반부패기관에 부패방지 정책·제도 설명 등 K-반부패 확산 협력
 - ※ APEC 반부패 투명성 실무그룹 회의시 부패방지국장이 의장 역할 수임(2.27.-28., 7.30.), 고위급 대화 패널 토론 발제(7.31.) 등 한국 반부패 성과 홍보
 - ※ UN·G20·OECD 등 국제기구의 반부패분야 평가·보고서 관련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사례 수록 등 협력

○ 교육현장과 연계한 미래세대 청렴교육 추진 토대 마련

- (청렴교육 기반 조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제도적 근거 마련) 교육청 협의·국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 공공부문 청렴 역량 강화 지원

- (공공기관 반부패 협력 강화)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안 사항을 집중 논의해 범정부적 정책 이행력 확보
- (종합청렴도 평가 보완) 기관유형별 워크숍 확대 개최, 지방의회 청렴 노력도 비중 대폭 상향, 기관 평가부담 경감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
- (청렴도 저조 기관 컨설팅) 청렴도평가 결과 저조 기관에 대한 기관별 취약점을 심층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 ※ '25년도 컨설팅 참여 기관의 66.7%가 청렴도 상승, 최근 3년간 참여 기관의 82.7%가 3년 내 상승 효과
 - ※ 참여기관의 만족도 88.2%(전년대비 6.0%p 증가), 참여기관이 체감하는 효과성 87.0%

- (반부패교육 이행관리 강화) 기관장 참여 확대, 대면교육 강화,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 실시로 이수율 제고

※ 전체공직자 교육 이수율: ('16) 85.3% → ('18) 91.2% → ('20) 93.3% → ('22) 95.6% → ('24) 96.0%

○ 반부패 규범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실효성 제고

- (이해충돌방지 운영 개선) 규제합리화 및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확인 절차 간소화'

※ 특정기술, 단독생산 등 수의계약 체결 가능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 확인을 위해 최초 계약 체결 시에만 확인서를 1회 징구하고, 확인 완료 시 반복 징구 유예(3년)

- (이해충돌 해석기준 정비) 관리감독을 위해 출자기관의 당연직 임원이 된 경우, 사적 이익과 무관함에도 공무 수행 시 신고·회피 문제 개선

※ 공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회피 의무 제외: ❶ 법령·기준의 위임을 받아 정관에서 당연직 임원을 규정 ❷ 주무관청 등이 해당 정관을 인가 ❸ 겸직하거나 취임승인 등을 받은 경우 모두 충족 시

- (신고처리방식 개선) 신고자 의견수렴 절차 명확화,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지침 개정

※ 위임전결규정 개정사항(중요사항 전결권 상향) 반영,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및 사건처리기간 유예사유 추가

○ 실태점검 등을 통한 반부패 제도 운영 내실화

-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각급 기관별 법 위반신고 처리실태 등 제도 운영 실태점검으로 부적절 사례 적발·시정 등 취약부문 개선

※ '16.9월 법 시행 이후 총 16,175건 신고 접수, 2,643명 형사처벌과태료 등 제재 확인,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등 운영 미흡 및 부적절 처리 공공기관 시정조치

- (이해충돌방지법 취약부문 점검) 서면조사, 현장 실태점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내실화 및 법 규범력 제고

※ 공공기관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및 ②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개정 등 기관별 운영기반 마련 여부 ③ 공직자의 신고 의무 이행 및 기관 조치 ④ 제한금지 의무 관리 ⑤ 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결과 등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취약 운영 분야 집중 파악

○ 수요자 맞춤형 교육·홍보로 자율적 준법의식 고취 및 청렴문화 확산

- (청탁금지법 설명회)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주요 판례·해석례, 제도 운영사례 공유 등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국가, 지자체, 각급학교, 경찰관서 등 1,180개 기관 1,641명 참석 ('24년 953개 기관 1,341명)

- (이해충돌방지법 설명회) 운영지침 개정사항, 빈발질의 관련 해석기준 등 안내를 위한 기관별 제도 운영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등 798개 기관 1,169명 참석 (9.18.~9.29., 총 10회)
-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현장의 고질적 부패관행 개선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지방행정의 관행적 부패·불공정 요인 제거를 위한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전수점검 최종 마무리
 - (재정낭비 개선)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하위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을 집중점검(10월~12월)
-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 근원적 해소
 -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25년 총 1,352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 결과 120개 법령에 대해 234건 개선권고(개선권고율 17.3%)
 - (개선권고에 대한 적극적 사후관리) 최근 5년간 중앙,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대상 제·개정법령안 및 현행법령 등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 ※ (제·개정 법령) 1,570건 중 1,124건 이행('23년 86.3% → '24년 92.2% → '25년 90.6%)
-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현장 및 민생현장 관행적 부패 개선
 - (시·도교육청 전수점검) 17개 시·도 교육청 전수 점검, 청렴도가 낮은 교육청(5개)은 현지 점검('25.2.~6.)
 - ※ 외부강의등 미신고(1,186건), 국외출장여비 과다지급(1,280건),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483건), 휴양시설 운영 부조리(4명, 323회 부정 예약)
 - (일선 공공기관 암행현장 점검) 설·추석 명절 전후 2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서 전문조사관과 협업하여 암행점검('25. 1월, 9월)
 - (신규 공직유관단체 이행점검) 공직자 행동강령의 도입·운영시기가 짧아 부패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신규 공직유관단체 집중점검(5월~10월)
 - ※ '21년 신규지정, 114개 기관 점검결과, 업무추진비 부적정사용 75건(4600만원), 경조사비 기준위반 5건(50만원), 국외여비 과다지급 18건(600만원) 등 적발
 - (신고사건 위반협의 기관통보율) 행동강령 신고사건에 대한 위반 협의 통보율이 전년도 대비 상승 전환
 - ※ '23년 40.3% → '24년 28.3% → '25년 38.1%

- 관행적 부패 근절을 위한 NEW 공직자 행동강령 추진
 - (법령개정) 적법성·타당성·적극행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하여 확대
 - ※ 법률개정안 마련(25.12), 추후 「공무원 행동강령」 및 모든 공공기관 행동강령에 반영 예정
 - (관계부처 협업) '간부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 근절을 위한 협업 추진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의체에 적극적 기여로 한국의 영향력 증대
 - (APEC 반부패 국제회의 성공적 개최)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반부패 분야 APEC 실무그룹 총회(2회) 및 고위급 회의 주도
 - ※ (실무그룹 총회) 2025년 ACTWG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 각 회원경제체 간 UN 반부패협약(UNCAC)·베이징선언 등 이행상황 공유 등(2월 경주, 7월 인천)
 - ※ (반부패 고위급대화) 3개 세션을 통한 국제부패범죄 대응 협력, 민간 청렴도 제고 협력, 반부패 교육 협력방안 논의 내용을 경주선언문 등 APEC 결과문서에 반영
 - (국제 반부패 논의 참여) UN, G20, OECD 등 주요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서 국제사회 반부패 의제에 적극 동참
- 반부패 기술지원으로 한국형 반부패 모델의 개도국 확산
 - (반부패 기술지원 성과) 기술 도입국의 반부패 지원시스템 개선 및 신고자보호 관련 입법 추진 등 정책공유 사업의 선순환 확립
 - ※ 몽골·코소보·우즈베키스탄 등의 반부패 플랫폼 개선 등 청렴포털 구축 지원사업 성과 가시화, 청렴포털 공유사업 성과보고회 완료('25.6월, 코로보)
 - ※ '16~'25년 동안 정책공유 사업 실시 10개 국가 중 9개국에 제도 현지 도입시행(수용률 90%)
 - ※ 신규 지원사업(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지원대상 : 잠비아, 타지키스탄, 바누아투, 통가 등이 선정, '26부터 착수예정
- 공공·민간의 경영부문 투명성 제고
 - (윤리경영 국정과제 추진)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제도 확산' 관련 국정과제 방향 수립
 - ※ 기업·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등급평가) 도입 관련 의견 수렴(전문가 간담회 2회)
 - ※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제도 운영 및 평가, 공공기관의 준법감시(부패예방) 전담 부서 지정 및 운영, 준법감시인 임명 등' 준법감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및 별도 법 제정 등 입법방안 검토
 - (기업 윤리경영 지원 강화) 경제단체 협업으로 참여기업 선정,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및 윤리경영 실행 매뉴얼 발간 등 윤리경영 실천 지원

○ 소통과 협력으로 공공·민간에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

- (민간보조사업 내실화) 비영리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익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인 청렴활동 독려
- (청년 정책제언 활성화) 2030 자문단의 적극적인 정책과정 참여로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제언 활성화
 - ※ 자립준비 청년·고립 청년 지원안 제언 등 52건 제언('24년 40건 대비 30% 증가)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각급 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체계적·효과적으로 감사·조사·평가·제도개선 권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 신고자 보호·지원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

-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 일원화)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수준의 동일성을 기하는 입법 추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25.12.)
- (공익신고 대상 확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4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493개→497개)
- (구조금 사무 운영규정 정비)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개정(7월)
 - ※ (주요 개정내용) ① 통원치료비용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②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사 조력 비용도 구조금 지급대상으로 명시

○ 보호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으로 신고자 신속히 보호

- (적극적·신속한 보호) 보호사건 접수가 급증했음에도 동일한 인력으로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이후 처리 실적을 혁신적으로 제고
 - ※ 처리건수 : '25년 823건, 전년대비 359건(77.4%) 증가
 - ※ 처리기간 : '25년 보호사건 평균처리기간 45.8일, 전년대비 40.2% 감축
 - ※ '25년 신고사건 인용률 : (부패) 37.0%, (공익) 58.4%, (전체) 50.4%

○ 신속한 보상사건 처리 및 적극적 포상사례 발굴

- (신속한 보상금 지급) 부패신고 보상금 224건 41.9억원, 공익신고 보상금 33건 3.9억원 등 총 257건 45.7억원 신속 지급
 - ※ 평균처리 기한 62일 달성 ('23년 82.5일 → '24년 76.1일 → '25년 62일)

- (신속한 경제적 피해 구제) 구조금 신청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업무 처리 개선을 통해 신고자의 신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구제
 - ※ (업무처리 개선) ①구조금 사건 처리 매뉴얼 제작, 조사관의 처리 역량 강화, ②치료비용, 이사비용, 소송비용 등이 함께 신청된 경우 쟁점 파악이 용이한 치료비용이사비용 우선 지급
 - ※ 최근 3년간 구조금 신청 현황 : '23년 48건 → '24년 62건 → '25년 123건
 - ※ 처리기간 단축 : '23년 206일 → '24년 87일 → '25년 60.9일
- (포상금의 적극적 지급) 부패신고 포상금 1건 0.4억원, 공익신고 포상금 5건 3.6억원 등 신고자 6명에게 총 4억원 지급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교육·홍보 추진
 - (실무자 교육)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부패·공익신고 접수 기관별 유형·특성 등을 반영한 권역별 실무중심 교육
 -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 실시 중앙지방공직유관단체 등 총 806개 기관 1,200명 교육 참석
 - (맞춤형 교육)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무원 및 시민감사관 등을 대상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 ※ 기획재정부(11.6), 제주도감사위원회(12.11), 교육청(충남 10.24, 강원 12.12)
 - (홍보물 제작·배포)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홍보 포스터·리플릿 및 공공기관용 업무 안내서 제작·배포
- 부패·공익침해 근절을 위한 반부패 규범 강화 노력
 - (법령개정) 부패 근절을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고, 부패공직자의 공공부문 영향력 차단을 위한 반부패 법률 강화 추진
 - ※ 부패행위 조사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조사권강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 부패·공익 신고사건의 전문성 있는 처리 및 철저한 사후 관리
 - (신고사건 적극처리) 부패·공익신고를 상시 접수·처리하여 지속적인 부패·공익침해 근절 노력
 - ※ 접수건수 53.8%▲('24년 2,889건→'25년 4,442건), 처리건수 53.1%▲('24년 2,736건→'25년 4,188건)
 - (사후관리 강화)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한 사건 사후관리 점검 실시 (총 1,539중 1,536건 회신, 99.8%)
 - ※ ①서면·유선점검 ②적극적 현지점검 ③기관별 평가 반영 등 단계별 책임관리 강화

- 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관행적 부패행위 적발 및 부패 근절 추진
 -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비리 실태조사) 서·남해 일대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입찰방해·허위납품 등 171억 상당의 부패행위 발생 사실 확인
 -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목적 외 사용 실태조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로 고가의 사적물품을 취득하는 등 부적정 집행액 총 25억 3천만 원(2475건) 적발
 -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무용 차량·운용 실태조사)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특수법인 중 공무용 차량 운용 599개 기관에 대해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및 관련 규정 부재 등 위반사항 적발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예방
 -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성 검토 자료, 대상자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관 확대('24년 36개 → '25년 40개)
 - ※ 총 4,927건 점검(3회)하여 48건 취업 제한 위반 적발, 25건 고발, 8명 해임 등 조치
 - (교육·매뉴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담당자 5개 권역별 교육('25.3.~5.),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FAQ 등 매뉴얼 개정·배포('25.11.)
- 이용자가 만족하는 원스톱 반부패 디지털플랫폼 '청렴포털' 제공
 - (의견수렴·기능개선) 대국민 공공기관 등 사용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청렴포털 단계별 기능개선 추진
 - ※ 사용자 서면의견 청취(3.13.~4.5.), 기능개선 논의를 위한 운영협의회(6.23.), 권역별 설명회(5회)
 - (만족도) 청렴포털 이용자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통한 다각도 기능개선 노력으로 이용자 만족도 지속 상향 ('23년 81.3점 → '24년 82.5점 → '25년 82.8점)
- 국정과제 반영·추진을 통한 공공재정환수 제도 기반 강화
 - (법령개정) 환수금 등 분할납부제도 신설, 신고자 보호위반 이행 강제금 규정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법 개정 추진
-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부정이익 국고 환수
 - (적극적 신고처리)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처리로 부정수급 적발·처벌 증가, 부정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
 - (철저한 사후 관리) 조사기관에서 장기간 미처리한 건을 파악하고, 지연 사유별로 분류하여 대응한 결과, 전년 대비 미처리건 감축
 - ※ '24년 431건 → '25년 377건(12.5% 감소)

○ **취약분야 실태조사로 부정수급 및 제재 사각지대 해소**

-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위탁 용역업체 선정 특혜 142억 원, 보조사업 예산 낭비 62억 원 등 정부 보조금 218억여 원 집행 부적정 및 관리부실 확인
※ 해당 지자체에 환수조치 요구, 관계기관(국토교통부)에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요구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주민대표의 보조금 사적 사용 등 집행 부적정 및 관리부실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조사결과 이첩하여 부당집행 금액 환수 및 정산 지침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권고

○ **이행실태점검과 체계적 후속관리로 부정수급 대응력 강화**

- (범정부 부정수급 전수점검) 소행정기관 공공재정지급금('25년 기준 279조원)에 대한 이행실태 전수점검 실시로 경각심 제고 및 정책 환류를 통해 부정수급 사전 예방
※ 제재처분액 : ('20년)457억원 → ('21년)1,055억원 → ('22년)1,336억원 → ('23년)1,522억원 → ('24년)1,330억
- (자체점검 노력 견인) 각급기관에서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제재 할 수 있게 자체 점검하도록 관리
※ 각급기관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시율을 청렴도 평가에 반영

○ **권역별·맞춤형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 차단 및 부정 환수 확산**

- (현장교육) 연간 4,657명 대상으로 33회의 교육, 컨설팅 등 실시하여 각급기관의 부정수급 인식을 제고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지원
-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행적·고질적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 기간 확대 운영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연 1회→4회)
※ 복지(3.31~4.30), 교육(6.1~6.30), 연구개발(9.15~10.12), 보건·의료(11.17~11.30)
※ 집중신고기간 신고 접수건수 전년대비 42.4% 증가(370→527건)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 체계 운영**

- (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채용에 대한 정례적(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적발 및 피해자 구제 추진
※ 채용비리 적발건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로 공직유관단체 불공정 채용 실태 개선 효과
(19) 182건 → (20) 83건 → (21년) 76건 → (22) 47건 → (23) 44건 → (24) 39건 → (25) 34건
- (신고사건 조사) 채용 관련 법령위반 및 부당 개입 등 채용비리 신고 사건 총 147건 접수, 174건 처리

- (피해자 구제) '19~'24까지 채용비리 피해자 334명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중 51명 채용

※ '25년 확인된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절차 진행

○ 채용사규 컨설팅 및 담당자 전문교육을 통한 공정채용 문화 조성

- (사규컨설팅) 채용규정상 미비점 등으로 인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규정 컨설팅 진행하여 공정채용 절차 마련

※ ('23년) 354개 기관 → ('24년) 402개 기관 → ('25년) 402개 기관 컨설팅 완료

- (전문교육) 공직유관단체 인사·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공정채용 발생 예방을 위해 전문교육 실시

※ '25년 공정채용 전문교육 1,208개 기관 9,211명 이수, 이 중 사이버교육 제외한 집합·화상교육은 774개 기관 1,624명 이수

○ 미래세대 대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맞춤교육 추진

- (협력체계) 대학 내 청렴교육 기반 구축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25개 대학과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특강 추진 및 대학 내 청렴 관련 교과 개설 등 상호협력

- (정규교과) 대학생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4개 대학(원)*에서 청렴 교육을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교과(전공·교양선택)로 개설·운영 지원

* 울산과학기술원('25.1·2학기), 한국교원대·한양대·전북대('25.2학기)

- (교육운영)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청년 대상 연령대별 눈높이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강의·참여·체험 형태의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청렴캠프, 대학 협업 청렴특강,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등

※ 총 100회 교육 운영, 11,736명의 학생이 참여, 특히 대학생·청년 참여 인원은 전년 대비 382%↑ ('24년 888명→'25년 3,393명)

○ 교육대상·방법 다각화를 통한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 (교육대상별 특화과정) 직급·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교육 운영

※ 고위·선출직(120회, 6,332명), 부패취약 분야 및 현장업무(계약·공사 분야 및 소방·교정직, 12회, 474명), 청렴강사(14회, 2,882명), 외국공직자 반부패 연수(3회, 48명)

- (접근성 제고) 청렴연수원 방문이 어려운 교육생을 위해 권역별 합동(8회) 및 비대면·하이브리드(대면·실시간 온라인 혼합) 교육 확대

※ 비대면·하이브리드 교육 참여인원 112.7%↑('24년 2,334명→'25년 2,631명)

○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국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

- (민생중심 민원처리) 행정의 최종 AS 기관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
 - ※ '25.12월까지 조사·처리한 고충민원 중 2,542건을 해결하여 5년 평균대비 높은 인용률 달성(최근 5년 평균 24.7%→'25년 25.5%)
- (빈발민원 기획조사) 생활 속 빈발민원 11건을 과제로 발굴하여 제도개선 권고 및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
- (취약계층 지원·보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구성·운영 및 멘토링 실시 등

○ 국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형·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국정기획위 협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지원을 위해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운영
 - ※ 6개 권역, 13개 지자체 상담장 운영 및 민생현장 14곳 방문, 총 850건, 일 평균 65.4건의 민원·제안 접수
- (달리는 국민신문고) 농어촌 지역 36곳과 청년세대·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생활현장 84곳을 방문하여 고충 해결(상담만족도 88.1점)
- (현장조정 활성화)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집단민원 292건을 조정 중재 해결, 약 6만 3천여 명 민원인의 염원 해결

○ 특이민원 적극 대응을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

- (실태조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특이민원 실태조사 실시(7월)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5개 권역 6회)
 - ※ 응답자 86%인 공직자 947명이 최근 3년간 상습·반복민원(70.9%), 폭언(63.1%), 신상공격(40.4%), 폭행(18.7%) 등 다양한 유형의 특이민원 경험
- (공유·확산) 실태조사 결과 각급기관 공유,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5개 권역 6회)

○ 범정부적 고충민원 처리역량 향상 지원

- (시고위 확대) '25년 중 6개 지자체에 신설 성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0개 지자체(41%)에서 시고위 운영('20년 대비 약 2배↑)

-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25년 평가 결과, 전년 대비 고충민원 부문 평가점수(2.2점▲) 상승
 -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고충민원 부문) : ('23) 76.3점 → ('24) 77.8점 → ('25) 80.0점
- '한곳에서 한번에' 종합적으로 민원상담을 처리하고 상담 해결 강화
 - (민원상담 처리) 민원상담의 신속한 답변 처리를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24시간 편리하게 민원 상담 진행
 - ※ 평균 처리기간 : '22년(2.2일) → '23년(1.5일) → '24년(1.3일) → '25년(1.2일)
 - (민원상담 품질 제고) 상담 내용 모니터링·상담운영 매뉴얼 및 전화 상담 DB 보완·상담사 교육을 통해 상담운영 표준화·상담 품질 제고
 - (상담해결 강화) 온라인상담 상담해결률·국민콜110 자체종결률 향상으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및 의사 결정을 돕고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
 - ※ 온라인 민원상담 처리 총 26,244건 중 24,389건(93.0%) 상담해결
국민콜 110 상담콜 총 2,198,935건 중 2,358,239건(93.2%) 자체종결
- 복합민원 대응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로 실질적·선제적 민원해결
 - (다수기관·복합민원 처리율 제고) 다수기관 복합민원, 평풍민원 등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해 실질적 민원 해결 도모
 - ※ 다수기관·복합민원 건수 : '23년(3,267건) → '24년(3,664건) → '25년(5,875건)
 - ※ 다수기관·복합민원 처리율 : 22.4%(목표치 대비 109.3% 달성)
 - (제도개선 과제 발굴·연계) 110 상담정보를 빈발·유형별 표준답변안 정리, 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 참고자료 등 활용 제공(173건)
-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으로 국민 편의성 증대
 - (110 통합상담 서비스 방안 마련)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25년 9월)
 -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번호안내 및 연결서비스 순차 확대(150개→697개 번호),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 110 일원화, 중앙행정기관 일반상담 콜센터(23개)의 110콜센터 단계적 통합 및 전문상담 콜센터(94개)와 유기적 연계 구축 등
 - (110 통합상담 서비스 추진기반 마련)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사업 근거 기반인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25년 12월)
 - ※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단(다수부처 협업형) 설치('25.12월)

○ 국민콜110 상담사 처우 개선 및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 근무환경 등에 대한 상담사 근무 만족도 조사 실시('25.11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적인 합의를 위한 교섭 실시 (12개 안전, 총 7회 교섭)
※ 적정 상담인력 유지, 조합원 신분변동, 실시간 모니터링 규제 등 6개 항목 합의, 6개 항목 교섭 진행 중
- 업무 프로세스 및 사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노사 실무 협의체 운영 및 요청사항 반영
※ 노조 사무실 환경 개선(컴퓨터·책상·의자·책장 제공), 상담석 빛 가리개 설치

○ 적극적 행정심판 심리와 시정조치를 통한 권익침해 해소

- (적극적 심리) 직권 증거조사, 처분 사유에 대한 심층적 검토 등 당사자 주장을 넘어 중앙행심위가 직접 실체적 사실을 확인·재결
- (시정조치)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권익침해 사전 예방
※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여 인용률 상승
※ 전체 인용률 '24년 6.0%→'25년 9%(3%p↑) / 일반사건 인용률 '24년 17.5%→'25년 28.3%(10.8%p↑)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이용 편의 향상

- (시스템 통합) 개별 행정심판 기관들이 각각 사용하던 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25.6월)
※ 국민이 개별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 없이, 통합 시스템으로 청구하면 관할 행정심판 기관 자동 배정(전체 118개 행정심판 기관 중 90개 통합, 참여율 76.3%)
- (기능 고도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 편의는 물론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진('25.12월)

○ 구술심리 참석 편의 확대로 행정심판 접근성 제고

- (구술심리 제약 개선) 가까운 광역지자체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3건)을 체결,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 완화
※ 어디서나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원격화상회의 시스템 구축('25.12월)
- (신청 편의 제고) 심판 청구와 동시에 구술심리·국선대리인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제도 안내문 추가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 온라인 행정심판은 청구서 작성 후 곧바로 국선대리인·구술심리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UI 개선

-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총괄·조정 기능 강화
 - 행정청 및 행심위에 대한 행정심판 관련 지도·점검 실시
 - 행정심판 심리·재결 중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및 이행여부 점검
- 국민과 행정의 소통을 매개하는 국민신문고 이용 기반 확대
 - (이용기관 확대)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1,312개로 확대(100개▲)하여 모든 행정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국민소통 플랫폼 기능 강화
 - (민원시스템 통합) 중복 운영으로 비효율적인 지자체의 온라인 민원 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243개 지자체 중 232개 통합, 21개▲)
 - (국민신문고 방문 증가) 국민신문고 방문자수가 연 6,700만명을 초과하여 전 국민이 1회 이상 찾는 가장 밀접한 공공 서비스로 발전
 - (이용자 만족도 향상) 국민신문고 이용자에 대한 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 80.0점으로 상승(2.0점▲)
- 인공지능(AI) 선제적 활용을 통한 국민권익 서비스 향상
 - (AI 서비스 개시)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는 지능형 민원서비스 도입
 - ※ 민원답변 초안 작성, 외국어 민원 자동번역, 빈발민원 자동병합 등 기능 구현('25.6월~)
- 평가·컨설팅 등 민원 집중관리로 각급기관 민원서비스 품질향상
 - (민원서비스 개선)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의 평가·점검을 통해 각급 기관의 민원처리 역량 제고, 민원서비스 수준 지속 향상
 - ※ 평가점수가 일반 행정기관은 4.4점, 공공기관은 6.7점 상승하는 등 전반적 점수 상승
 - (부진기관 컨설팅) 전년도 민원서비스 평가·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부진·미흡 기관에 대한 집중 컨설팅
 - ※ 컨설팅 받은 일반 행정기관의 80.4%, 공공기관의 100%가 전년대비 점수 향상
- 국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 강화
 - (우수 아이디어 발굴) 우수 국민안전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포상하고 정책반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참여 경험과 의욕을 제고
 - ※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717건 공모받아 우수아이디어 15건 선정·포상, 국민투표로 우수 국민안전 5건 선정

- (정책현안 의견수렴대)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해 관계 기관·부서와 협업 등으로 국민의견 수렴 50건(3건▲)
- (국민생각 정책반영) 국민생각함으로 수렴한 국민의 의견을 소관 기관에 연결하여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반영 43건(3건▲)

○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정운영 지원

- (생성형 AI 기반 민원분석 체계 구축)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대규모 언어모델기반 '생성형 AI 기능' 탑재 추진
※ '25년도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1,020백만 원)를 확보, '생성형 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시범 구축('25.7~12월)
- (국정현안 분석) 특정 현안·정책에 대한 민원추이·동향 위주의 신속한 분석(「여름철 배수시설,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재외국민 대상범죄」 등 총 10건)
- (기획 분석)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 민원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국민 목소리 정책 반영 지원
※ 「빈집, 「장례식장, 「연안 안전」 등 총 3건의 심층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개선·방향 지원

○ 국민의 소리 제공으로 국민불편 해소 기여

- (주·월간 「국민의 소리」 발간)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 등을 관계기관에 예보하여 대응책 마련 촉구(10회)
- (국민불편 개선) 불합리한 법령 등에 의한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통보(36건)하고 소관기관의 활용현황을 반기별로 점검(30건 해결)

○ 협업·개방, 신기술 도입을 통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 (협업 확대) 'AI 기반의 국민소통·민원분석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식약처 등 4개 시범 기관과 협업 추진
※ (식약처) AI기반 민원답변 초안을 생성·제공 시범 서비스 (국토부, 인천광역시, 시흥시) AI기반 중복·반복 민원 자동 식별 시범 서비스
- (이용 확대)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 및 Open-API 서비스 2종 추가 개방('24. 21종 → '25. 23종)
- (연구사업 협업) 데이터의 융·복합 분석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학계·전문연구기관과 간담회 및 협업 연구사업 추진
※ '25년 국토연구원이「AI기반 재해 초단기 예측을 위한 나우캐스트 연구」과제 관련 행안부·국조실과 활용방안 논의('25.7.), 주요 국내외 학회 발표('25.10.)

○ 「국민체감 제도개선 권고」로 국민권익 다각적 증진

- (제도개선 권고) 인구감소 대응, 국민안전, 공정사회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고충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36건 권고
- (부패방지 제도개선) 부패 유발 요인을 제도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
 - ※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강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제도개선안 권고
- (사회 현안 제도개선) 국민적 관심 높은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로 정부의 현안 대응 노력 뒷받침
 - ※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 여성의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 제한 개선,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등 개선 권고

○ 지속적 권고 이행관리·지원으로 「제도개선 최종 실현」 촉진

- (지속적 이행관리) 권고 대상 기관별 권고과제의 이행상황을 체계적 점검·관리하여 이행률 향상('25년 87.0%)
- (단계별 관리) ^(1단계)전수점검, ^(2단계)이행전략회의·컨설팅, ^(3단계)이행실태 현지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개선(전년대비 4.4%p ▲)

○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한 정책개선, 국민 수요 맞춤 행정 실현

- (찾아가는 적극행정) 주요 신청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소관기관에 정책 제안
 - ※ 국민신청 5,590건을 처리하여 그중 220건 의견제시('25.12월 기준)
- (소극행정 조치) 공무원의 소극행정 신고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기관의 업무처리방식 개선 등 조치 권고
 - ※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시행 이후 25,698건을 처리하여 83건에 대해 조치 권고('25.12월 기준)

○ 국민주권 정부 국정과제 마련 지원

- (국민제안 정책반영 지원) 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검토, 우수제안을 발굴하여 국정과제 설계 지원
 - ※ 13,588건 국민제안 전수 모니터링 → 420건 우수제안 발굴 → 237건 국정과제 반영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위 '사업운영의 우수성'에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함

□ 성과 우수성 인정 사례

- (국민권익증진 성과 홍보) 국민 고충민원 해결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국민권익' 웹진 소식지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정책 이해도 향상



➡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전자사보(웹진)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25.12.3.)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성과지표(사업)	자료명
1	청렴권익문화확산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소식지 '국민권익',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최우수상 수상

3) 미달성/초과달성 프로그램 원인분석

- (사업구성의 적절성)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권익증진’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17년부터 꾸준히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 정치, 경제, 문화 등 타 분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매우 적극적으로 상향하여 설정(‘20년부터 ‘24년까지의 평균 점수 62.6점에서 약 3.8% 상향된 65점)
 - (사업관리의 적정성)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국제평가 기관과의 소통 방식 다변화 및 네트워크 구축
 - ※ 월드뱅크(WB) 주최 세계거버넌스지수(WGI) 워크숍 참석(3.12.~16., 미국 워싱턴DC),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포럼 참석 및 발제·토론(6.23.~27., 폴란드 바르샤바), 열린정부프로그램(OGP) 대표단 면담(8.7., 한국 → WJP 포럼 참석(6월)의 후속조치 일환)
 - 대한상의(3.6., 4.15.)·상장사협의회(3.11.)·경제인협회(11.13.)·윤리경영 기업인 면담(11.26.) 등 CPI의 주요 타깃 그룹인 기업인과의 정책간담회 활성화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2.27.) 및 고위급대화(7.31.), 주한외국 상의 임원 초청 간담회(4.17.)에서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성과 발표
 - 국내의 평가 유관기관(주한 외국상의)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총 7회)하고, 국내외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정책홍보 추진 및 최신 반부패 자료 보급(매월)
 - 권익위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부패방지 정책·제도를 종합한 국·영문 브로셔 제작 및 APEC 등 계기에 배포하여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들의 논평*에 따르면 2024년 말 국내 정치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되었고, ▲’25년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IMD**등)의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논평(25.7월) “24.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 드러냄”
- ** 국가청렴도에 반영되는 9개 세부 지표 중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점수가 ‘24년 61점에서 ‘25년 49점으로 12점 하락

(4) 향후 개선사항

- (문제점) 전년보다 하락한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해 전략적 개별평가 지수 관리 및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 필요

☞ 개별 평가지수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국가청렴도 개별 평가지수에 대한 중점 홍보전략 및 현지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반부패 성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반부패 국제기구들과의 협업 확대

- (문제점) '22년 종합청렴도 평가로 개편된 이후 대상기관이 지속 확대되어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평가기관 수를 일부 조정**·시행

* ('22년) 573개 기관 → ('23년) 628개 기관 → ('24년) 718개 기관 → ('25년) 721개 기관

** 기관별 수행업무(부동산 직접 취급기관)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평가 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평가 실시 등

☞ '26년 종합청렴도 평가 시 '25년도 평가대상에 미포함되었던 공직유관단체(지방공사·공단 등) 등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없는 평가 실시('26.3월, 기본계획 수립)

- (문제점) 청렴컨설팅 실시 완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미비로 청렴컨설팅 효과 지속성이 제한될 우려

☞ 전년도 청렴컨설팅 완료기관 대상 설명회, 컨설팅 이행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컨설팅 지속효과 유인('26.1월, 청렴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 (문제점) 이해충돌방지법 상 내부고발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없으며 신분노출 우려 및 신고 저해

☞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비밀보장 강화, 대리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 징송, 보호신청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지원 근거 마련(~'26.8월, 개정안 국회제출)

- (문제점) 제·개정법령 대비 자치법규 개선권고의 이행률이 다소 낮아 신속한 권고 반영을 위한 개선 필요

☞ 장기 미이행 및 부진 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정권고안 마련 등 신속한 권고 이행이 가능하도록 실무형 지원을 강화(연중)

- (문제점) 신고사건 실태조사시 일부 기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패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입법 추진 노력 지속(연중)

○ (문제점) 종결 대상 신고사건 급증으로 공익신고사건 이첩·송부율 감소

☞ '26년도 공익신고 이첩·송부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증거부족으로 종결되는 사건 중 증거 보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이첩·송부율 향상을 위한 노력 추진(연중)

○ (문제점) 일부 행정기관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기관 내외 압력 등 사유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

- 이행실태 점검 결과 토대로 개선 권고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청에서 미이행하는 경우 강제할 규정이 없어 제도 실효성 저하 우려

☞ 행정기관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조치 미이행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소명을 의무화 하는 등 조치 방안 마련('26.8월,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제출)

○ (문제점) 사규 컨설팅·교육 등으로 공정채용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으나, 실태조사에서 일부 기관이 반복적으로 적발

☞ 수사의뢰·징계요구 등의 조치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기관에 대해 감독기관 관리 외 권익위 직접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의 별도 대응 추진(~'26.12월)

○ (문제점) 학생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이 초등·대학생에 편중되어, 중·고등학생 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상황

☞ 중·고등학생 맞춤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26.12월)

○ (문제점) 전국에 산재한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간 표류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조정을 통한 해결이 시급

☞ 조정신청권 부여 등 조정 활성화를 위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마련하여 입법 추진('26. 상반기 국회 제출)

○ (문제점) '28년 비긴급전화 110통합 사업시행 전 혼선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및 대응계획 마련 필요

☞ '26년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차질없이 수행 계획(연중)

- (문제점) 행정심판 절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필요
 - 처분의 제3자의 심판 청구, 제3자의 심판 참가 시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사인 간에 노출되는 문제점 발생
 - ※ 교육청 행심위 등에서 청구인-제3자 간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 다수 발생

☞ 현행 규정 상 개인정보 비식별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필요 시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26년)

- (문제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등에 한 국선대리인 조력을 제공하여 행정심판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법안 심사 지연
 - ※ 「행정심판법」 개정안(☎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안)

☞ 권익위 중점 입법 과제 선정에 따른 조기 법 개정 노력 지속, 개정 전까지는 국선대리인단 중 일부를 활용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26.12월)

- (문제점) 그동안 국민신문고에 AI 활용이 일부 도입되었으나, 주로 단년도 위주로 추진되어 부분적·단편적 성과에 집중되는 한계점 존재
 - 민원, 제안, 국민참여 및 민원분석 등을 포괄하는 AI 국민권익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로드맵 마련 필요

☞ AI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와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26.12월)

- (문제점)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상시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취약점 발굴·개선 필요
 - 국민신문고의 지속적 성장으로 회원수가 370만 명에 달하고 매년 1,300만 건의 민원 등이 등록되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증대

☞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 추가·강화하고, 이용기관이 보존기관 경과 민원 등을 적시에 폐기하도록 보안 및 관리체계 강화('26.12월)

- (문제점) 기존 사례집에는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처리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아, 사안별 구체적 해결 노력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사례집을 대국민 홍보 및 컨설팅·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실제 업무처리 서류(문서, 보고서 등), 근거법령 및 규정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개선('26.1월)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프로그램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평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별첨1

회계·기금별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비고	
	예산(A)	결산(B)	예산(C)	결산(D)	C-A	D-B
□ 합계 (A+B)						
○ 총지출	1,128	1,080	1,083	1,043	-45	-37
○ 총계	1,128	1,080	1,083	1,043	-45	-37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495	495	521	505	26	10
○ 기본경비	78	72	81	78	4	6
○ 주요사업비	555	513	481	460	-75	-53
□ 예산계 (A)						
○ 총지출	1,128	1,080	1,083	1,043	-45	-37
○ 총계	1,128	1,080	1,083	1,043	-45	-37
【일반회계】						
- 총지출	1,128	1,080	1,083	1,043	-45	-37
- 총계	1,128	1,080	1,083	1,043	-45	-37

별첨2

사업유형별 재정운용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1,128	1,080	1,083	1,043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285	276	270	256
	정보화	270	237	211	204
	R&D	0	0	0	0
	소계(A)	555	513	481	460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495	495	521	505
	기본경비	78	72	81	78
	교부금	0	0	0	0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573	567	603	583

○ 예산과 사업주체가 다른 단위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 원)

소관	기금명	'24년		'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해당사항 없음					

별첨3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도 평균
1	1	1	-	-	1	96.9%
		100.0%	-	-	100.0%	

2. 성과지표 유형별 실적 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수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합계
	0	0	0	1	1
초과달성	0	0	0	0	0
	0.0%	0.0%	0.0%	0.0%	0.0%
달성	0	0	0	0	0
	0.0%	0.0%	0.0%	0.0%	0.0%
미달성	0	0	0	1	1
	0.0%	0.0%	0.0%	100.0%	100.0%
미달성 지표의 달성률 평균	0.0%	0.0%	0.0%	96.9%	96.9%

3.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성과 분야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3년	'24년	'25년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 : I-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①국가청렴도 (CPI) (점)	일반 재정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 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목표	64.0	64.0	65.0
					실적	63.0	64.0	63.0
					달성률	98.4%	100.0%	96.9%

별첨4

성과목표 관리체계별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5년 예산	'25년 결산	집행률
총 계					481	460	95.7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481	460	95.7
프로그램목표 I-1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481	460	95.7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4	14	97.8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211	204	96.7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회계	1100-1133		12	12	96.7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4		96	93	96.6
	국민고충해소	일반회계	1100-1135		16	16	98.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16	109	93.8
	행정심판	일반회계	1100-1137		15	13	85.8

별첨5

프로그램별 사업 설정현황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5예산	25결산	과제번호	비고
11	0	010	016	1100	국민권익증진	9	1101	인건비	1	100	인건비(대상)	52,132	50,514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11	0	010	016	1100		9	1111	기본경비	2	200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3,595	3,427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11	0	010	016	1100		9	1111		2	250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4,529	4,37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11	0	010	016	1100		9	1131	청렴권익문화 확산	1	300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390	1,359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2	청렴권익행정정보화	3	320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0,901	10,620	I-1-정보화	
11	0	010	016	1100		9	1132		3	321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467	3,466	I-1-정보화	
11	0	010	016	1100		9	1132		3	322	통합콜센터시스템 운영(정보화)	6,737	6,331	I-1-정보화	
11	0	010	016	1100		9	1133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3	331	반부패기술지원(ODA)	250	248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3		3	332	청렴권익국제교류	670	644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3		3	333	청렴권익민간협력	320	306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4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2	340	부패·고충제도개선	83	80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4		2	341	종합상담창구운영	9,526	9,199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5	국민고충해소	1	350	고충민원조사활동	1,600	1,575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반부패청렴정책강화	8	360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984	2,868	I-1-재정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5예산	25결산	과제번호	비고
11	0	010	016	1100	국민권익증진	9	1136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8	361	청렴교육및의식 확산	2,415	2,237	I -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3	공직자행동강령운영	78	77	I -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4	신고자보호보상및 공익신고제도운영	5,426	5,066	I -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6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221	212	I -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7	청탁금지제도운영	169	155	I -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8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210	190	I -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9	채용비리통합신고 센터운영	81	62	I -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7	행정심판	1	370	행정심판운영	1,543	1,324	I -1-재정	
합계												108,326	104,333	-	-

<일반회계>합계	총 세부사업수	22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19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3
----------	---------	----	------------------	----	-------------------	---

전체 합계	총 세부사업수	22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19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3
-------	---------	----	------------------	----	-------------------	---

1. 프로그램 목표 수정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과제번호)	예산 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지표 분야	수정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지표명	가중치	지표명	가중치				
전략목표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 I-1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I-1)	45,157	44,830	국가청렴도(CPI)	1	국가청렴도(CPI)	1	64.0	65.0	일반 재정	'24년 실적치(64점) 확정에 따른 목표치 상향 조정

2. 보조사업 수정 현황

프로그램명 (과제코드)	세부사업	예산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수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권익증진 (I-1)	청렴권익민간협력	354	318	민간보조사업 성과	민간보조사업 성과	88.6	88.6	예산 일부 감액 외 변경사항 없음

별첨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프로그램 (코드번호)	세부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25년 목표치	'25년 실적치	'25년 달성률
국민권익증진 (1 -1)	청렴권익민간협력	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 평가점수 산술평균 (100점 만점)	88.6	90.0	101.6